

이덕일의 '역사의창'



검경 수사권과 조선의 권력기관들

태조 이성계와 삼봉 정도전 등 조선 왕조의 개창자들은 새 왕조가 오래 유지되기 위해서 국왕을 포함한 모든 권력이 견제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왕의 권력 견제를 위해서 복역(覆逆)과 간쟁(諫爭) 제도를 만들고, 고위 대신들의 권력 견제를 위해서 탄핵 제도를 만들었다.

복역이란 지금의 비서실 격인 승정원에서 임금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명령 받기를 거부하는 제도이고, 간쟁이란 국왕의 정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시비하는 제도였다. 또한 백관은 탄핵을 당하면 혐의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무조건 사임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막강한 간쟁권과 탄핵권을 가진 부서가 대간(臺諫)으로 불린 사헌부와 사간원이다.

그런데 이처럼 막강한 사헌부와 사간원의 직제는 그리 높지 않았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사헌부의 수장인 대사헌은 종2품, 사간원의 수장인 대사간은 정3품이었다. 종2품은 지금으로 치면 차관급이고, 정3품은 차관보급 정도이다. 이 정도 직급의 대간들이 1품만

다섯 명이 포진한 의정부 대신들을 거침없이 탄핵했다. 사헌부는 여기에 수사권까지 갖고 있었으니 위세가 더 막강했다.

그러나 두 기관의 공통 특징은 가난하다는 점이었다. '연려실기술'의 '관직전고'(官職典故)는 사헌부에 대해 '심히 맑아서 물력(物力)이 없다'고 하고 있고, 사간원에 대해서는 '제일 청한(淸寒)하다'고 적고 있다. 사간원 표피(司諫院豹皮)라는 말이 있었다. 사간원은 워낙 가난했기에 관원들 화식비도 없었다. 그래서 사간원에 있던 표피(豹皮:표범 가죽) 한 장을 여러 아문에 돌려가면서 돈을 꾸어 썼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명예를 먹고 사는 기관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간에게 절대 권력을 주지는 않았다. 먼저 수사권을 여러 기관에 나누어 놓았다. 사헌부가 대표적인 수사기관이었지만 의금부와 형조도 수사권이 있었고, 지금의 경찰에 해당하는 포도청도 수사권이 있었다. 문종 즉위년(1450) 4월 삼군도진부(三軍都鎭撫) 등이 사헌부에서 사간원의 관리를 수사한 것이 공경하지 못하다고 보고하

자 사간원 관리를 의금부에 내리서 수사하게 한 것이 이를 말해 준다.

대간들은 또한 피협(避嫌)과 상피(相避)를 엄격하게 적용했다. 본인에게 털끝만한 하자라도 있을 경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피협이고, 유관 부서에 이해관계자가 같이 근무할 수 없게 한 것이 상피이다. 성종 10년(1479) 대사헌 어세겸(魚世謙)은 동생 어세공(魚世恭)이 병조판서가 되자 즉각 면직을 요청했다. 사헌부는 병조의 분경(奔競:염관운동)을 살피고 정사(政事:인사권)의 잘못을 탄핵하는 기관이므로 동생이 병조판서가 되었으니 대사헌을 사임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처럼 상호 견제를 가한 큰 원칙으로 삼아 권력 기관을 운용했기에 조선은 권력형 부정부패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권력기관의 의도된 '모든 체'로 묻혀지는 일도 없었다. 이는 조선의 권력 기관 운용 시스템과 명예를 중시하는 선비들의 처신이 만든 업적이었다.

검경 수사권 논쟁이 다시 재연되었다. 새 정권 들어 국민들이 뽑은 1순위 개혁과제가 검찰 개혁이고, 그 다음이 정치

개혁, 언론 개혁, 노동 개혁 순이었다. 조선의 사헌부는 차관급 1명의 부서로서 임금에게 간쟁하고 고위직을 상대로 사정 활동을 벌여 백성들의 신망을 한 몸에 샀다. 여기에 비해 차관급만 무려 42명 이상에 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독차지하고 있는 검찰이 개혁 과제 1순위에 올랐다는 것은 검찰의 반성을 요구하기 전에 그 자체가 이 나라 권력 기관 운용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반증일 것이다.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아서 수사권을 주자는 것은 아니다. 일단 검찰의 전횡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 때문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간단한 명제를 무시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 독점권은 1912년 일제가 만든 조선 형사령에 있었다. 독립운동가들을 쉽게 때려잡고 쉽게 감옥에 처넣기 위해 만든 제도가 광복 73년이 넘도록 유지된다는 자체가 선조들에게 크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한기람역사문화연구소장)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료칼럼



박지한 광주 우리들병원 대표 원장

허리 디스크에 대한 작은 오해

심지어 병원에 처음 방문한 환자가 스스로 병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 방법을 결정해 상담하는 경우도 있다. '내 몸은 내가 잘 압니다.'라며 의사에게 "잠자는 A와 B만 진행하고 치료는 C로 하겠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이런 분은 병원과 의사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어 치료보다 먼저 신뢰를 쌓아야 하는 경우다.

그렇다면 환자들은 왜 허리 디스크 치료에 있어 수술을 기피하는 걸까? 과거 20-30년 전에는 대학 병원 같은 큰 병원 조차 의술 및 장비가 부족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허리 통증이 심해서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올바른 순서에 따라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과거엔 부족한 의술, 장비, 정보만을 가진 상황에서 정확한 진단이나 검사도 없이 무리한 수술이 진행됐고 이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때문에 잘못된 지식과 오해가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이렇게 생긴 잘못된 지식과 오해로 인해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조차 제대로 된 치료법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여기에 '이 방법이 좋다.' '어디에 무슨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좋아졌다.' 등 전문가가 아닌 주변 사람들의 이

야기와 인터넷에 올라온 수많은 홍보 글들은 정확한 치료와 간절한 환자에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만든다.

실제 상담을 나눴던 환자 중 아주 젊은 20대 환자가 있었다. 아직 젊은 나이였기에 애초에 가족들은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동네 아주머니의 의견에 따라 가까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꾸준히 물리 치료와 침 치료를 한 달 정도 진행했지만 효과가 없자 큰한방 병원에 입원해 관리를 받았고 다시 한 달 정도 지나니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했다. 하지만 퇴원하고 2주 후 다시 통증이 찾아오자 병원을 오게 된 케이스였다. MRI를 촬영한 결과 이 분은 이미 디스크가 튀어나와 척추 주변 신경을 누르고 있는 케이스로 한방 병원에서 진행하는 보존 치료로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경우였다. 비(非) 수술 치료 방법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이뤄졌고 회복이 빨라 사흘만에 퇴원하게 됐다.

모든 상황이 위 사례처럼 극적으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요통이 있을 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만으로 시간과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

현재는 척추 병원을 중심으로 허리 디스크 치료를 위한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전문적인 검사 장비는 물론 시술이나 수술을 위한 체계적 수준의 장비들도 구비돼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환자 입장에서 보자면 허리 디스크 수술 성공률이 높아졌고 합병증 위험이나 후유증이 적으니 허리 수술에 대해 큰 고민하지 않고 얼마든지 의사와 상담을 통해 고려해 봐도 된다.

물론 여기까지 말해도 여전히 허리 수술에 대해서 만큼은 의심이 되고 걱정도 될 수 있다. 병원에 가면 상담하자마자 '수술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비용은 얼마나 들까?' '일을 그만둬야 하나?'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등 등 고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요통이 있다면 고민보다 중요한 건 빨리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받고 의사와 상담해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100세 인생 시대. 건강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나이를 먹을수록 병원을 찾는 이유가 늘겠지만 그 중에서도 요통만큼은 초기에 정확한 치료로 잡아 보자.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허리 건강에서 시작된다.

社說

특혜 주고 뇌물 받고 한전 임직원들 왜 이러나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 태양광 사업 비리로 후역을 치르더니 이번에는 임직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대거 검찰에 적발된 것이다.

광주지검이 기소한 한전 임직원은 모두 9명으로 이들은 배전공사 업체에 거액의 추가예산을 배정해 준 대가로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7200만 원까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삼암이사와 1급 간부 등 본사 고위급 간부 두 명과 지역본부 간부들이 포함돼 있다. 뇌물 총액은 5억3000만 원이나 된다. 이들은 한전의 예산을 마치 자신들의 주머니돈처럼 퍼 주고 업자들로부터 2%를 리베이트 방식으로 챙겨왔다.

한전 예산은 본예산에 해당하는 '기초예산'과 추경예산에 해당하는 '추가예산'으로 구분되는데, 배정 재량권이 큰 추가예산을 기초예산보다 많이 편성해 업자들에게 퍼 준 것이다. 한전 모 지역

본부의 경우 지난해 기초예산은 485억 원인데 비해 추가예산은 545억 원이었다. 이들은 추가예산의 40%에 해당하는 221억 원을 특정 업자에게 몰아주고 뒷돈을 챙겼다. 업자들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중복 낙찰을 받은 뒤 돈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뇌물을 받은 임직원들은 받은 뇌물을 일정 비율로 상사는 물론 부하 직원들과 나눠 기졌다. 한전 비리가 일회성이 아닌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상납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한전은 2016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 송배전 시설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체면을 구긴 바 있다.

한전 임직원들의 잇따른 비리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는 국내 최대 공기업이라는 신뢰에 먹칠을 하는 행위이다. 한전은 철저한 내부 시스템 관리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근로 시간 단축' 대비 철저 시민 불편 없도록

주당 근로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남 버스 업계와 어린이집 등에서는 여전히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갈등과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임금과 대체 인력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못할 경우 자칫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목포·여수·순천·광양 자동차 노조는 최근 버스회사 측과 임금 및 근무 형태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다. 목포의 경우 노조는 격일제를 1일 2교대로 바꿔 '주 52시간 근무 체제'를 도입하고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월급 감소분 보전을 포함해 임금을 43.44%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 측은 적자 누적으로 임금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버스 노사가 '탄력 근로제' 도입에 합의한다 해도 목포에서만 40여 명의 버스 기사가 부족해 버스 21대를 줄여

운영해야 할 형편이다. 여수와 순천 지역도 각각 20대와 10대의 버스를 감축할 계획이어서 시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어린이집도 대체 인력 문제로 숙업을 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한 시간 의무 휴식'을 보장해야 하지만 대체할 보조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별도의 휴게 공간도 없어 혼선 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전담에 350여 명의 보조 교사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이 1241곳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보완이 절실하다.

비단 이들 업계뿐만 아니라 인력 총원과 인건비 대책 마련에 애를 먹고 있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 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부여하기로 했다.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대비해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자동차 생산 합작법인을 함께 만들겠다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스텝이 막판에 약간 꼬인 듯하다. 그들이 하려는 모든 것이 '국내 최초'인데, 당연히 그런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예 판이 깨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린 시민들도 상당수였을 것이다.

소비 도시 광주에서 일자리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지역을 떠났고, 대기업 공장이 몇 개 없

취마 협상

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에 6개국 재상을 지낸 소진(蘇秦)은 유세를 하기 위해 공부에 매진

했다. 그 마지막 과목이 취마였다. 취마란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해 거기에 맞춘다는 뜻이다. 취마를 비롯해 유세를 익히면서 소진은 추자고(錐刺股,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른다는 의미)와 두현량(頭懸梁, 머리카락을 대들보에 매달았다는 의미)의 고사성어를 남겼다. 광주시와 현대차 협상팀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추자고·두현량의 자세로 광주, 그리고 일자리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에 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기고



김병수 광주 동구 부구청장

출산·보육 환경 개선으로 희망찬 동구를

2065년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1년을 정점으로 5296만 명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2065년에는 1990년 수준인 4302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실제로 2017년 대한민국은 사상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했다.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 7000명으로, 역대 최하위였던 2016년 40만 6000명에 비해 4만 8000명이나 줄었다.

이런바 인구 절벽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텐트가 제시한 '인구 절벽'은 생산 가능 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현상이 발생하면 투자와 노동, 국내 총생산과 같은 경제 지표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된다는 물론 고령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재정 지출 부담도 막대해진다.

이러한 저출산과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 모든 국가와 도시가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여 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다. 그렇지만 막대한 비용에 비해 효과는 미미했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만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회·경

제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특히나 동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막대한 출산 장려금이나 양육 수당 등을 독립적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다.

동구는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산수동에 '영유아 플라자'를 건립하고 있다. 도시 재생 거점 시설인 푸른마을 공동체센터 1~2층에 들어설 영유아 플라자는 539.6㎡ 규모에 장난감 도서관, 책도서관, 실내 놀이터, 여성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춘 예정이다. 최근 동구 지역에 도시 개발, 재개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며 2만여 세대의 신규 입주자 기대된다. 영유아 플라자 주변에만 1만여 세대의 입주자 예상되는 만큼 영유아 플라자가 가족·공동체의 육아 기능을 보완하는 육아 지원 기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영유아 플라자가 준공되는 8월에 '제2회 장난감 나눔 축제'를 개최할 예정

이다. 지난해 처음 열린 장난감 나눔 축제는 10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집안에 잠자고 있는 장난감을 세척해 교환하고, 출산 장려 홍보관 운영과 아트폰션, 페이스 페인팅, 비눗방울, 칼라 클레이 등 다양한 체험 마당이 펼쳐져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 축제는 영유아 플라자 개관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 주민들에게 출산과 육아의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보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초보 아빠를 위한 '행복한 아빠 교실', 영유아 건강 수당 지급, 다자녀 산모 및 난임 부부를 위한 반값 한방 치료 사업 등 동구만의 특색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지역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종합 정책을 수립해 각자의 실정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 우리 동구는 앞으로도 저출산 해결에 대한 지역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 지역 맞춤형 출산·보육 정책을 펼칠 것이다. 지역민들도 동구의 출산·보육 정책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당부 드린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미 디 어 부 220-0664	FAX 227-9500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